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88-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음 11월 4일) 제16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민주당 “탄핵 밀어 붙인다”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야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끈적적이지 않는 채 탄핵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및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야당의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김무성 전 대표 또한 추기에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 혼자서 탄핵이 가능하겠느냐”며 야권의 탄핵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이같이 ‘캐스팅보트’로 꼽혔던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대오가 흔들리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 또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 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탄핵안 발의를 질질 끌었다 가는 비박계 이탈표가 더욱 많아지리라 하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금태섭 대변인은 “우리로 당연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결이 100% 보장되는 경우는 대체 언제냐, 리스크는 9일 표결이 더 높다고 본다”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일단 표결을 시도하는 게 맞지, 한 차례 미뤘다가 그 사이에 박 대통령이 또 대국민담화로 사퇴 시한을 밝히면 어쩌느냐”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퇴 시한을 기다리면서 퇴진 일정 협상을 시작하지는 여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이 아닌, 박 대통령의 퇴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춧불 민심’에 어긋나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4월 퇴진’은 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 논의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춧불 민심’에 어긋나 탄핵의 핵심은 ‘직무정지’

야3당 대표, 탄핵안 논의 국민의당의 반대로 탄핵안 발의하지 못해

실상 내년 4월까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순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당 안팎에서는 탄핵은 그대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여론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 이후 새누리당을 ‘최순실 부역자’로 싸잡아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숨어있다.

▲추미애 “새누리 비박계, 9일도 탄핵 추진할 의사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비박이 실제 탄핵의 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춧불민심과 달리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 비박의 탄핵의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만날 결과 9일에도 전혀 탄핵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됐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정하면서 탄핵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긴급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민의당의 반대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김민근 기자

박지원 “새누리당 비박의 태도변화 기다려보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야3당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가결이 목적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일 표결 대신 탄핵안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고, 3일 추밀집회로 새누리당 비박계 등에 대한 민심 압박을 이어간 후 9일 탄핵안을 표결하는 협상안을 두 야당에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야3당 대표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일 탄핵안 표결 고수

“우리 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박이 탄핵에 동참하도록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총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저희와 통화가 되는 비박 의원들은 대통령이 오는 7일까지 퇴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하는 것도 (가결이) 불투명하고, 9일도 불

투명하다”면서도 “그 불투명성이 함께 있다면 제 안은 9일까지 (비박계의) 변화를 보고 9일날 하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당이 낸 안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발의를 야3당 공동으로 하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본회의 일정상 탄핵안 발의를 보고하고 9일에 표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대통령 퇴진을 가장 먼저 당론으로 결정했고, 또 탄핵

도 맨 먼저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그 목표를 발의에 두는 게 아니라 가결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인내하면서 3당 공조를 철저히 하고, 또 비박의 태도 변화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나도 비박을 많이 만나보니 전부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역구에 가서 협상도 못 해보고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도 명분이 있고 참어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도내 건설업체 수주율 전반적 향상

수주금액 1조1391억원으로 60% 차지 전년대비 3.7% ↑

올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1조1,391억원으로 60.8%를 차지해 전년대비 3.7% 상승했다.

또한 하도급 역시 전년보다 513억원 증가한 3,825억원으로 58.4%를 점유했으며, 지역자재는 전년대비 118억원이 증가해 도내 업체 자재가 91.1%를 차지했다.

다만, 도내 공공부문 SOC예산 감소(전년대비 16% 감소)로 도내 업체 수주를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감소했다.

전년대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향상된 원인은 올해 발주된 신규사업이 대부분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통도급으로 발주돼 지역업체 참여가 높아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켜 하도급 및 지역자재 구매도 동시에 향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관기관의 수주율도 전년대비 6.4%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농어

촌공사 전북본부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국가계약법 등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이 각각 83.8%, 81%를 차지하고 하도급률도 90%가 넘는 등 유관기관 도내업체 수주율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설계시부터 분리발주 등을 통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통도급 발주를 추진하고, 지역의무공통도급 발주시에 도 지역업체 의무도급비율을 49%(규정 : 30% 이상) 이상으로 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는 50여건의 신규사업을 모두 지역제한으로 발주했고,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도 3공구 호안가토제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한바 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향상됐지만, 새만금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만큼,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도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여야,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정부는 반대입장... 야권, 정부 압박 강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1일 조원 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역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환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지만 결국 또 누리과정예산에 묶였다”며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스

도, 공무원 최종 합격자 38명

전북도가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8명을 선발·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7급과 기술직9급 등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38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4세로 지난해(31.4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20대 합격자가 26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8.4%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일부터 사흘간 본인이 응시한 임용예정 기관(전북도, 시·군)을 방문해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